

“동해에 석유·가스 140억 배럴 매장”... 산유국 기대감

포항 영일만 앞바다 연말 첫 시추 천연가스 29년·석유 4년 간 쓸 양 삼성전자 시추 5배 2200조원 가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했다.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첫 국정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동해안 물리 탐사 결과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해 광구로는 세계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어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밝혔다.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배석해 “물리 탐사는 객관적 수준에서 진행해 검증까지 받은 상황이고, 실제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로 매장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안 장관은 그동안 한국석유공사 등 동해, 서해, 남해에서 석유·가스를 시추해 오다 최근 동해 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에서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높은 수준의 확률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지난주에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께서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탐사 계획을 승인해 주셨다. 조만간 후속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 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이 매장 가치가 현실에서 삼성전자 시추총액의 5배(2200조원) 수준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형식으로 현안을 설명한 것은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기자들을 상대로 중대 현안을 직접 보고하는 국정브리핑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국정브리핑’이란 형식을 도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이 아쉽게 마무리됐는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 달에 한 두 번, 특정 이슈에 대한 국정브리핑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고민을 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째 도어스테핑이란 유례없는 언론 접촉 형식을 의욕 넘치게 도입했지만, 2022년 11월 18일을 끝으로 중단했고 이후 한동안은 언론과 아예 대면하지 않았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로는 직접 대통령실 인사를 발표하고 기자회견과 출입기자단 만찬을 진행하는 등 언론과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현안을 언급한 것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약 한 달 만으로, 앞으로도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직접 내용을 설명하는 국정브리핑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두루 묻는 기자회견도 계속하게 되겠지만, 국정브리핑은 그보다는 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질문도 받으려고 한다”며 “현안이 있을 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보고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 동해 석유·가스 매장량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

으뜸 전남 자치경찰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서비스 제공

섬 지역 치안 인프라 구축 “전국 1위”

사회적 약자 보호

2023년 상반기 국민 체감안전도 “전국 1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전국 1위”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Jeollanamdo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가능

오늘 국무회의 상정해 의결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기대

했다.

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나가기로 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 비무장화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명시됐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연합뉴스

“팔이도 넘는 게 없어요” 지역업자의 절규 ▶6면

굿모닝 예향-강진 여행·로컬 브랜드 ▶18-19면

타이거즈 전망대-롯데와 흥경기 ‘설욕전’ ▶22면